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개최된 '농협금융 신년 경영전략회의'에서 '2019년 우수 계열사 시상식' 후 (왼쪽부터)배영훈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 이구찬 NH농협캐피탈 대표,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NH농협금융, 미래 10년 '디자인' 경영 선포

중장기 전략·핵심실행과제 논의

NH농협금융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에서 '새로운 10년을 위한 2020년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수 회장를 비롯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집행간부, NH미래혁신리더 등NH농협금융그룹 임직원 160여명이 참석했다.

NH농협금융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난 10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10년간 나아가야 할 중장기 전략방향과 2020년 핵심 실행과제를 공유했다.

김 회장은 NH농협금융의 향후 10년의 전략방향이 담긴 새로운 경영슬로건으로 '새로운 10년(New Decade)! 디자인(DESIGN) NHFG!'를 선포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변화·혁신을 통해 농협금융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2020년을 디자인 농협금융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미래를 위한 변화(變化) ▲경영체질 강화(强化) ▲사회와의 조화(調和)를 목표로 총 9개의 핵심전략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 10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의미를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며 "피카소가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실존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 처럼 기존 관행의 파괴와 혁신적 재창조를 통해 '디자인 농협금융'을 과감히 실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법정구속 피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리스크 덜고 '2기 경영' 본격화

오는 3월 정기 주총서 정식 연임
일등 넘어 일류 도약 가속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며 법적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했다. 항소로 재판이 다시 진행되겠지만 앞서 연임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정구속을 피하면서 조 회장의 '2기 경영체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조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재판을 45차례에 걸쳐 많은 소명을 했는데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 회장은 "그 동안에 (채용과 관련해) 여러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연임에는 문제가 없다. 2심 등을 거쳐 최고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법정구속만 아니라면 회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만우 회추위원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다"며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적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린 만큼 조 회장은 2기 경영체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은 올해를 일등을 넘어 일류(一流)로 도전하는 원년으로 선포했다.

조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오늘날 신한은 대한민국 리딩 금융그룹으로 우뚝 섰지만 이제 단순한 1등이 아닌 '일류(一流)'라는 더 큰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올해는 지난 3년 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2020 스마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해이자 일류신한을 향해 도전하는 원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되어 있고, 인수합병(M&A)을 둘러싸고 국내 금융사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승인되면 조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회동 경쟁력 강화 묘수 나올까

여신전문금융업과 29일 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여신전문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오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윤창호 금융산업국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업계 CEO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금융업권별 CEO 간담회를 열고 업권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국회 일정으로 이달 9일 예정됐던 여전업계 CEO간담회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 측은 "여전업계 CEO 간담회가 국회 일정으로 인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릴 여전업계 CEO들의 간담회에서는 주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는 지급결제회사(페이사)에 대한 소액여신(소액대출)기능을 추가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있다. 관련 핀테크사의 여신한도를 30~60만원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여신 등 신용공여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만 가능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과 경쟁해야 해 반발하고있다.

캐피탈 업계와는 부동산 리스 규제 합리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부동산리스 업무와 관련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P2P금융법' 입법예고… 금융위 제도 정비

P2P금융업, 양분된 협회 통합
등록요건, 의무사항 등 세분화

8월로 예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P2P금융업계도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의회'로 양분된 협회를 통합하고 법정협회로 출범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입법예고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하위규정에는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자기자본 연계 투자비율 및 일반 영업행위 의무사항 ▲투자·대출한도와 금융기관 연계투자 시 상품별 투자한도 등이 보다 세분화된다.

현재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소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P2P금융업체는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하고 최고금리(연 24%) 아래로만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등 행위는 할 수 없다.

연계 대출시 모집금액의 40%이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곳으로 분리돼 있던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협의회'도 법정협회를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지난 21일 마켓플레이스협의회는 법정협회 설립을 위해 협의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 한국 P2P금융협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협회 활동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P2P금융법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는 법인으로 협회를 설립해야 한다.

P2P금융업체는 필수의무로 협회에 가입하고,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력해 회원사에 대한 지도와 권고, 자율규제, 민원, 공시, 표준 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올 상반기 안에는 법정협회를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정협회 설립 준비와 제반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국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의무적으로 P2P금융업체가 모두 가입해야 하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들어 공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11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되었으며, 올 8월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

"비대면 해외 송금시 경품"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비대면채널 해외 송금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해피 뉴이어(Happy New Year) KB 해외 송금 감사 이벤트'는 리브(Liiv)나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상의 해외 송금 거래를 이용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외국환은행지정등록을 한 후 미화 1000달러 상당액 이상 해외로 송금한 개인 고객은 경품 추첨 기회를 두 번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우리銀 업계 최초 AI기반 제재법규 심사시스템

우리은행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재법규 심사시스템을 시중은행 최초로 자체 구축하고, 이를 수출입 선적서류 심사업무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에는 이미지 인식 기술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수출입 서류 분류부터 텍스트 추출, 데이터 축적, 심사 프로세스 등을 자동화했으며 추가검증이나 심층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인력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심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심사항목 자동추출 및 필터링 ▲통계적 분석을 통한 위험요소 자체점검 ▲심사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로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미 금융당국이 아시아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규제 준수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인 이후 국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제재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은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배치 함으로써 미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hong93@